

제18회 아산정책연구원 서평회, 2018년 1월 31일,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이영훈 저, 『한국경제사』 (일조각, 2016)  
강진아(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1.

평자는 삼 년여 전에 한양대학교 비교역사연구소에서 주최한 저자의 저서 구상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책 초고 단계에서 저자의 욕구를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다. 오늘 또 다른 토론자로 참여하신 우대형 교수님 역시 2014년의 토론에 함께 참가하셨던 기억이 난다.

평자는 그때 7페이지 정도로 이미 충분한 질의를 했었고, 또 평자의 전공은 중국근현대경제사 이어서 한국경제사의 석학이신 저자의 학문적 응축에 새삼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가 가능할까 걱정스럽다.

2014년 토론회에서 저자께서 귀 기울여 주셨던 것은 총 36개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일종의 총론적인 필자의 문제제기였다(이하 존칭 생략). 그때 저자는 “시장경제체제”를 키워드로 근대 경제의 탄생의 핵심을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으로 보고 가난한 나라를 바로 이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했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평자는 “근대적 성장/경제”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생산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문제 제기하였다. 토지-인구압이 한계에 봉착한 경제의 돌파는 어디까지나 “산업혁명”이라는 에너지혁명과 기계화가 결합된 비약적 생산성의 혁신을 통해 가능했고, 원산업화 내지 “근세(early-modern)”, “원근대(proto-modern)”는 비로소 “근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와 “산업혁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묻고, 제도경제학적 해석에만 집중할 경우 놓치게 되는 혁신과 생산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출간된 책에서는 “시장경제체제”라는 개념의 출현 빈도는 확연히 줄었고, 보다 다양한 환경생태론적 요인, 지정학적 요인, 특히 (평자가 생각하기에 저자가 중시하는) 제도적 요인(국가, 법률 등 상위 제도에서 신용, 공동체, 가족 등 하위 제도까지)을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구사하여 한국경제의 역사적 경험을 설명하고, 시대 구분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2014년의 토론회에서도 평자를 가장 감복시킨 탁월한 분석은 역시 시대구분의 잣대로 생활과 조세 수취단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심태(心態)와 상위의 사회제도까지도 규정하는 측면을 생생하게 그려낸 점이였다. 책에서는 그 점이 보다 분명히 시대구분으로 정리되었다.

제1시대 : BC.3세기-7세기, 생활단위는 연(烟), 생산/수취단위는 취락

제2시대 : 8세기-14세기, 세대복합체 정(丁)

제3시대 : 15세기-19세기, 국가 관리의 호(戶)

제4시대 : 20세기 이후, 개인(個人)과 순수혈연공동체로서의 호(戶)

경제사에서 이러한 창조적 시대구분이 가능한 것 자체가 한국경제사 연구의 수준과 저자 연구의 독보적 수준을 알려준다고 평자는 생각한다. 향후 다른 지역 경제사에서도 더욱 검토되어야 할 접근법이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제4시대를 일제강점기부터 “개인(個人)과 순수혈연공동체로서의 호”로 한반도 사회의 기초 단

위가 재편되었다는 것은 약간 의아했다. 왜냐하면 일본 자체도 호적법(戶籍法, 1871)의 제정에서 통치 대상이 되는 주민을 가(家) 단위로 등록했는데, 이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전통적 호적 제도의 요소가 짙게 남아 있다. 1898년 일본제국헌법 공포에 이어, 1899년에 제정된 국적법을 보면, 국적의 부여와 이탈은 여전히 개인이 단위가 아니었다. 일본 호적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일본 국적을 가졌고, 일본 국적에서 나가려면 일본 호적에서 이탈하면 된다. 그러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려면 먼저 일본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또 호적이 가(家) 단위이므로 처와 자녀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아버지나 남편을 따라가야 했다. 홀로 이탈하거나 진입할 수 없었다. 식민지 조선은 조선 호적에 따로 등재시켰으나, 대민 파악 원리는 마찬가지로였고, 다만 일본 호적에 통합하지 않은 것은 국적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다. 본국인 일본마저도 그러한데, 조선에서 “개인”의 탄생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여 저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수취의 대상으로 “호(戶, 가장이 존재하는 혈연적 소가족)”가 아니라 “세대”가 수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언제인가이다. 또 조선 시대 호적에는 독신자의 분거세대(1인 세대)는 존재하지 않았는가?

3.

저자는 동아시아 삼국, 중국 일본 조선을 모두 노동집약적 소농사회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하야미가 규정한 “근면혁명(industrious revolution)” 사회였다면서, 서유럽의 자본집약적 “산업혁명”과는 발전 경로 자체가 달랐다고 보았다. “소농사회”를 강조할수록 한, 중, 일은 “같은 바구니”에 담기게 된다.

그런데 “근면혁명”을 원공업화 단계의 공통적 속성으로 보는 경제사학자들(드 브리, 캘리포니아 학파 등)의 입장에서는 “근면혁명”이 발전할수록 초래되는 노동집약화의 강화 및 토지-인구압의 증가는 세계 선진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아시아적 특성으로 지목되는 소농경제, 원공업화, 근면혁명, 인구증가는 근세 프랑스 농촌지역에서도 목격된다. 다만 소농경제는 아닐지라도 역시 토지-인구압이 높고 노동집약적이었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따라서 하야미의 이론을 빌은 카와카츠 헤타의 위와 같은 구분법은 이제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자는 “산업혁명” 자체가 돌출이었다고 보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러한 돌출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을 제도적 원인에만 찾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단 산업혁명과 같은 효율적이지만 대폭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혁신을 사회에 제대로 도입할 때에는 그에 유리한 제도적 셋팅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래야 유리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나는 제도적인 틀로는 설명이 안 된다.

최근 한국어로 번역된 로버트 C. 앨런의 책(이강국 옮김, 『세계경제사』, 교유서가, 2017)은 새삼 “임금”과 인간의 욕망에 주목한다. 그는 “최저생계 수준은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를 제거한다.”고 말한다. 너무 싼 임금은 기계 개발과 도입할 인센티브를 없앤다. “최저생계 수준은 빈곤의 덫이다. 산업혁명은 바로 높은 임금의 결과였다. 산업혁명은 높은 임금의 원인만이 아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단순한 고임금과 높은 소비수준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임금의 상대 가격”이 유럽에서 가장 비쌌다는 점이다. 1500년대 후반에 자본 서비스의 가격과 비교한 임금을 보면 영국 남부나 프랑스, 오스

트리아가 모두 비슷했으나, 18세기 중반에는 영국에는 자본이 넘쳐나고 탄광 개발로 에너지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에 대한 임금의 상대 가격이 대륙 국가들보다 60%가 더 비싸졌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연관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나 발명에서는 영국이나 대륙국가인 프랑스가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영국에서만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영국 기업들은 “값싼 에너지와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여 값비싼 노동을 절약하면 이윤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했고, 영국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자본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생산성 높아졌으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랬던 영국을 이긴 것은 역시 자본 대비 임금이 더 비쌌던 미국이었다(하바쿠의 가설).

4.

그렇다면 2권에서 저자가 추적했던 한국경제의 “근대화”, 그 과정은 결국 영국이 만들어낸 “산업화한 근대 경제”를 나머지 세계가 차등적으로 공유/분점하고 따라잡기하는 더 큰 과정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력 신장 이후 유럽대륙의 국가들이 추고한 표준적인 발전 전략은 나폴레옹의 제도적인 혁명에 기초하여 “4가지 긴급 과제”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역시 로버트 C. 앨런)

- 1)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교통을 개선하여 전국 시장을 대규모로 창출하는 것
- 2) 영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유치산업(infant industries)’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하는 것
- 3) 통화를 안정시키고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는 은행을 설립하는 것
- 4) 기술 도입과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 교육을 확립하는 것

이상이 “영국 따라잡기 정책”의 핵심 전략이었다. 위에 나열한 것을 보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실시한 것, 중화민국 성립 이후 북경정부-남경국민정부가 실시한 것과 똑같고, 그리고 광복 후 한국정부가 실시한 것과 똑같다. 왜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것과는 완전히 똑같지 않은가? 그것은 독자적인 정치권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매순간 조선의 지역적 이익과 일본 본토로부터의 요청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필자가 연구했던 설탕과 소금도 그랬다. 조선은 개항 후 설탕을 처음으로 대규모로 수입했고, 청일전쟁 패배 이후 홍콩당에서 일본당으로 조선시장의 패자(覇者)는 달라졌지만, 식민지 시기에는 메이지정당이 평양에 공장을 세우고 싼 임금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뒤, 일본 본토까지 수출했다. 그러나 일본 설탕업자의 로비로 조선 설탕은 수입이 곧 금지되었다. 조선 개항 후 국산 자염은 개항 직후 일본 소금에 위협받다가 중국 산둥에서 수입되는 천일염에 완전히 압도되는데, 결국 경쟁력에서 안 되자, 조선총독부는 1900년대부터 조선에서 천일염장을 조성하여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본이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산둥성 독일 세력권인 청도를 접수하여 청도염을 대대적으로 조선에 팔도록 했고, 조선총독부는 수입대체와 조선 내 염업 이익 확보보다 수입 청도염(한때는 관동염)을 우선했다.(비슷한 사례로 중국 비단에 대항하여 수입대체화 차원의 조선내 양잠업 양성 과정에서, 1924년 사치품세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비단 수입을 우선시했던 것).

36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식민지 기간이지만 20세기 초는 세계적으로 위와 같은 “따라잡기”

와 새로운 중화학 공업/자동차/비행기의 등장, 과학기술혁명,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이 맹렬하게 일어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한반도에 “따라잡기형 발전”을 추진할 독자적 정치권력이 없었던 것은 향후 한국경제에도 두고두고 짐이 된다.

로버트 앨런은 “가난한 국가들이 가난한 이유는 선진국이 과거에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즉 후발국가들은 저임금과 중급의 기술을 결합하여 저자가 말한 “부가가치의 중류(中流)” 내지 “하류(下流)”를 담당하기 쉽다. 중진 내지 선진으로 진입하려면 “혁신” 내지 “도약”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기존 전통과 제도만큼이나 혹은 더 핵심적 것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와 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적합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국가”의 질적 수준이다. 약간의 운(luck) 역시도.

한국경제사에 관해서 앞으로 필독서가 될 저자의 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황적으로 “비교사적” 접근이 (글의 성격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약하고, 과거에 있던 사상(事象)에서 그 이후의 사상(事象)으로의 인과율 규명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았나하는 점이다. 사실 그 경우 다소 결과론적 해석이나 불균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

이상 제게 주어진 시간이 10분-15분이므로 큰 문제의식만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후에 독자의 한 사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